

『인권연구』 7(2): 353-379.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7(2): 353-379.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4.7.2.353>

[한국인권학회 2024년 하반기 공동학술대회]

<라운드테이블: 아리셀참사와 느린 재난 - 재난 인권×이주민 인권> 지상중계

- ▶ 일시: 2024년 10월 9일(토) 10:00~11:30
- ▶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제2창학캠퍼스 창학B142
- ▶ 사회: 주윤정(부산대)
- ▶ 패널: 백도명(서울대)
김태윤(아리셀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권미정(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이 완(아시아인권문화연대)
- ▶ 기록: 최유민

주윤정

저희 부산대학교 SSK 느린 재난 연구팀은 경기도와 그리고 아리셀 참사 대책위와 같이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전지 공장 조사와 회복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팀은 이제 경기도에 자문 활동을 하면서 일종의 백서 혹은 보고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거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배움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리셀 참사 배움과 회복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당사자 시민사회 그리고 이제 전문가 그리고 관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

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논의 구조를 함께 만들고,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한 16차례 정도 회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이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재난 인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당사자의 목소리들을 경청하고 사회가 그 목소리 안에서 어떤 다른 길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코넥이라는 회사 앞에서 계속 농성하고 계시는 유족분들께서 굉장히 어렵게 지금 여섯 분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히 아리셀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며 추모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백도명 교수님께서 잠시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가 추모의 마음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도명

아리셀 참사로 인해 이런 좌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리셀 유족분들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다 만나 뵙고 말씀 들어보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연길에 갔었던 그 기억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중국에 가는 일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연길에 가서 그 대학을 방문하고 마을도 가고 했는데 크게 기억나는 것 중 하나는 마을 분들이 저녁 때 나오셔서 춤도 추시고 체조도 하시는 걸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왔다고 식사를 차려주시는데, 놀랐던 것 중 하나는 먹어도 먹어도 다 먹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할 때 모자란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그 거를 나중에 물어보면서 알게 된 그런 경험이 굉장히 색달랐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가족이라기보다는, 흔히 대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대가족을 넘어서 마을 내지는 커다란 한 마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아마 고향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말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출신,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그래서 여기 오신 지금 유족분들 각자 아마 위치는 다르지만, 고향에 있는 아는 분 내지는 고향에서 같이 이렇게

어떤 경험을 나눴던 분 또 고민을 나누고 우리가 같이 살아갈 분이 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오셔서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묵념을 하시겠습니다.

(추모)

주윤정

이번 세션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리셀 참사로 인해 한국 사회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사건이 났을 때 나오는 어떤 즉각적인 반응과 분노만이 아니라 사회가 정말 깊이 숙고해야 되는 어떤 문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인권적인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꿔 갈 수 있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백도명

제가 가끔 이주노동자분들 진료를 나가서 만나 뵈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진료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갖고 오시는 문제, 의학적인 거라고 하지만 갖고 오시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약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거기서 진료를 받았던 증상과 비슷한 증상이 와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꽤 많으세요. 이게 살던 곳을 떠나면서 연결이 되지 않으니깐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쪽의 방식으로 약을 드리고 진료를 받는 제도가 이 분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려면 그 삶 자체가 (이어져야 하는데) 좀 많이 이렇게 이어지지 못하는 지점들이 있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런 이주 노동과 동포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 한국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만 받아들이

고 그게 어떻게 보면 대상화 내지는 사물화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단위로 내지는 그냥 물건을 제공하는 물건을 다루는 사물의 단위로 이렇게 취급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 분들의 삶이 단절되면서 생기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일방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상호 서로 필요로 하는 그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오늘 오신 아리셀 유족 분들을 비롯해서 외국에서 이주해서 오신 분들의 바람이 뭔지 내지는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이제 융합이 될 수 있는 내지는 그걸 가지고 서로가 돌볼 수 있는 아마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방향을 찾아가는 길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뭘까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권미정

개인적으로 이번에 아리셀의 중대 재해 참사를 하면서 되게 많이 반성했어요. 우리 시민사회 운동과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가 조금 더 인권과 노동을 보장하는 사회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뒤늦게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계속 존재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우고 있었던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분들을 중국 동포라고는 생각했지만, 동포 노동자로서의 존재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아닌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주 노동자라고 할 때는 대부분 다 약간 동포 노동자들이 아닌 동남아나 다른 곳에서 오신, 흔히 비자로 구분할 때 E-9 비자라고 하는 취업 비자 중심으로 일하시는 분들만 많이 고려했었습니다.

60만이 넘는 중국 동포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우리랑 같은 일터에서 같은 사회에서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우린 그분들을 우리와 함께 가는 동반

자로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노동자의 권리,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어느 만큼 고민하고 함께 싸워왔나 하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리셀 중대 재해 참사 대해 인권적 관점에서 제일 고민했던 것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는 없는 걸까 그냥 사회적 약자라고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조건 하나하나 놓여 있는 아주 세심하게 다른 그 조건들을 고려하고 배려하면서 우리는 고민하고 그 방안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일까 사실 이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찾아보고 얘기해 봐야 할 주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도 지역마다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흔히 말하는 국가와 민족이라고 하는 그 큰 부류에서 한국 사회는 인구의 구성이 많이 달라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문화적 차이에 대해 서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이주해 오신 또는 이민을 해온 분들이 한국 사회에 융합하기를 원해왔다는 거죠.

한쪽이 우리에게 유입되어 들어왔으니, 우리에게 맞추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아닌지 그러므로 아리셀 중대 재해 참사에서 저는 지자체들이 고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가족들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구를 계속 들이밀었던 것은 한국 사회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족과 그리고 우리 중국 동포들이 생각하는 그 가족 친족 인척의 범위가 굉장히 다르고 서로의 생활상에서 어디까지를 공유하는가 범주가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걸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중대 재해 참사를 나름대로 지자체들이 노력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 기준을 우리에게 두고 그들의 문화 방식이라든지 그들의 삶의 조건에 대한 고려나 고민 없이 우리가 정해 놓은 정책에 맞출 것을 요구해 왔던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운

지금 참사가 벌어진 지 139일이 되었고요. 그리고 본사인 에스코넥 앞에서 천막농성을 한지 한 달이 됐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람들을 만나면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는데 저희의 안녕은 지금 139일째 멈춰져 있고 그 안녕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려면 제대로 된 진상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들이 마련되고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을 때, 저희의 안녕은 다시 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아리셀 참사와 관련된 약간의 과정과 그리고 그 속에서 저희 유가족들이 느꼈던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 CCTV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40초라는 골든타임이 있었습니다.

출입구에는 3만 5천 개의 배터리 셀들이 적재되어 있었고, 실제 군대에 납품하는 불량 배터리, 이 리튬 배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저희도 이번 참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리튬 배터리는 외부의 충격, 온도, 습도에 민감해서 이 부분들을 제대로 고려해서 배터리를 제조하지 않으면 발열 현상이 일어나고 그 발열에 의해서 열폭주로 폭발해 버리는 성질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리튬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소량씩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혹시 아리셀 공장에 가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공장의 철근이 녹아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리튬 배터리는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벽에 보관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았습시다. 국방부에 납품하는 배터리들이 문제가 된 건데요.

2021년부터 24년까지 아리셀 공장에서는 군대에 배터리를 납품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국방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하거나 성적을 조작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고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라면 국방부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해요. 그리고 이 납품의 거래를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묵인하에 계속 납품을 받았습시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납품 기일에 맞추기 위해서 배터리들을

하루에 평균 2,500개씩 제작했던 것들을 5천 개 이상씩 제작하게끔 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 고용 구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미숙련된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이 과정에 투입합니다.

이 분들이 실질적인 안전 교육이라든지 내가 어떤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지도 모른 채 이 일에 투입이 되었고요. 투입되는 과정에서 이 물량을 뽑기 위해서 케이스에 리튬 배터리를 넣는데 고무망치로 두들겨서 억지로 끼우게끔 한다거나 이 불량품으로 만들어진 리튬 배터리를 따로 빼냈다가 납품 기일을 못 맞추니까 그거를 납품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리튬 배터리에서 발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셀의 대표라는 사람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열이 올라오게 되면 발열을 체크하는 센서가 있을 아십니까? 그 센서가 한 10 몇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걸 일반 미숙련 노동자들이 손으로 만져서 열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라는 식으로 하면서 그 불량품들에서 발열이 되면서 이게 연쇄 폭발로 이어졌고 3만 5천 개의 셀이 한순간에 터져버리면서 폭발해 버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 리튬 배터리의 가장 위험한 유해 물질인 염화 티오닐이라는 성분이 그냥 그대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 노출되는 과정에서 질식사하셨고 질식사 이후에 골든타임인 40 초 이후에 이게 폭발해 버리면서 이 말씀드릴 때마다 우리 유가족들이 막 우시는데 시신이 제대로 된 시신들이 없습니다. 다 훼손돼 버리고 그런 상태로 이 사고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고 과정에서 문제 지점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산업안전 교육들이 제대로 됐더라면 이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상구를 찾아서 비상구에서 대피하는 거지 CCTV에 있는 것처럼 일반 소화기로 해서는 꺼지지도 않는 거고 한국에는 이 리튬 배터리를 소화할 수 있는 소화기가 없다고 합니다. 터지려고 했을 때 이게 발열이 되면 무조건 도망쳐야 하는데 도망치려면 그걸

알아야 했고 두 번째는 비상구를 알아야 했는데 이분들은 비상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곳에 모여서 돌아가셨던 그런 상황인데 비상구도 몰랐지만, 비상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피할 수 없는 구조, 이주 노동자들은 이 비상구에 아이디 카드와 지문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상구를 알았다 하더라도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의 탐욕이 만들어낸 만들어진 참사였고 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국방부에 납품하면서 배터리 시료를 바꿔치기하고 성적을 조작했는데 이거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참사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구요. 노동부도 마찬가지로인데요. 노동부는 이 리튬 배터리가 유해 물질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했는데,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성 평가인데 알아서 위험성 평가하고 그걸 봐서 잘 했으면 그냥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나왔지만 23년도 위험성 평가를 앞부분 연도만 바꿔서 24년에 다시 냈어요. 그런데 노동부는 이 평가서를 보고 잘했어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여기를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해서 산재보험료를 감면해줬습니다.

세 번째는 이 리튬 배터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아리셀 현장에서도 3~4차례 폭발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3년 동안 특별근로감독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안 나왔냐라고 얘기했더니 노동부 장관 하는 말, 사람이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못 나갔다. 그리고 2명 이상 죽지 않으면 특별 근로 나갈 수 없다는 게 노동부의 답변이었습니다.

노동부가 실질적인 관리 감독의 기능들을 제대로 했더라면 그리고 기업이 미숙련된 노동자들을 허가받지 않는 업체를 통해서 대거 투입해서 아무런 안전 교육 없이 이 일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회적 참사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유가족들이 싸우지 않으면 누구도 이게 왜 우리 가족들이 죽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누구도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참사 이후에 저희가 봤던 정부는 막을 수 있는 참사를 막지 못했고 두 번째는 유가족들이 왜 우리의 가족들이 죽었는지 알 권리를 묵살했습니다.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장례 절차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가면 산재 관련해서 이렇게 처리해 줄 거라는 게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지자체나 정부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 조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저희에게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이고 더불어 이런 참사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관리 감독(의 부재)과 그리고 자본의 탐욕이 불러일으킨, 위험의 외주화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죽음의 외주화일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고용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싶었던 거지, 장례 빨리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를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조차도 유가족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싸우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잊혀버리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이 아닌지, 저는 이게 노동 인권의 시각으로 봤을 때 고용 구조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사회와 정부에 의해서 그리고 자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시스템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런 참사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참사의 과정을 역으로 짚어보면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험성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야 하고. 유해 물질도 싸우면서 유해 물질로 등록이 됐지, 7월 전까지는 등록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사고 예방, 관리·감독, 안전 교육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실태 조사를 하고 그 속에서 제대로 된 정책들을 만들었을 때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지금 현재 본사인 에스코넥에 가서 싸우고 있습

니다. 에스코넥도 이번 2017년, 18년 압수수색 결과 나왔는데 군납 비리로 82억 원의 횡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군납 비리도 똑같은 시료 바꿔치기와 성적 조작을 하면서 17년부터 진행됐던 과정이고 아리셀이 설립되면서 이거에 대한 업무 지시를 했던 과정 그러면 이 과정이 얼마나 겁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이걸 묵인했던 정부의 정확한 무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리셀 감사의 책임이 에스코넥 본사에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리셀 감사는 아리셀 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월호 이후에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이런 중대 재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정책적으로 이런 고민을 많이 좀 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시고 제안된 내용들 속에서 다시는 이런 감사가 벌어지지 않게끔 많은 힘들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엄정정(유족대표)

이번 감사에 딸을 잃었는데 진짜 눈앞이 깜깜합니다. 애를 보냈는데 억울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50일이 다 됐는데도 회사 측에서는 사과 한마디 없었고요. 우리가 이주 노동자여서 차별 대우를 하는 게 이번 감사로 인해 사람을 딱딱 갈라놓는 한국 사회가 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우리도 다 대한민국에 와서 진짜 세금도 꼬박 꼬박 냈고요. 범죄를 범하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 온 지 저는 이십 몇 년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별 당할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진짜 회사 측에서만 차별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이버에서 아리셀을 치면 다 나오잖아요. 댓글 달린 것 보면은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너무 아픡니다.

같은 사람인데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그런 얘기할 수 없을 텐데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딸을 잃어서 가슴이 아픈 것도 있겠지만 진짜 아리셀 감사, 이런 감사를 안 막으면 또 다른 집의 딸들, 다른 집의 아들들 이런 참

사로 갈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짜 가족이 이렇게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상실인지 진짜 너무너무 큰 상실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차별하고 진짜 너무 터무니 없는 댓글 다는 분들도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래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이런 위험한 장소에서 노동하는 분들 노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면 진짜 발 벗고 돌아다니며 말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터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 지금 힘차게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지지해 주시고요. 많은 글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도명

김태운 대표님께서 소상하게 희생자 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었는지 그게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를 꼭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소위 산업안전의 방식이나 아니면 재난도 마찬가지로 일 것 같은 한데 교육, 점점 내지는 조치들이, 특히 소위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고 그거에 대한 기업의 대응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평가를 하는 이유는 평가를 통해서 인식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면서 위험에 대해 알고자 하는, 알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자기 본인이 선택 내지는 행동할 수 있는 걸로 이어진다는 게, 위험성 평가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유인데 그건 아주 제대로 작동이 되는 시스템하에서만 사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결국은 평가가 서류상으로만 평가 그 자체로만 수행되는 것에 그치고 그게 인식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지금 평가와 인식의 괴리를 메워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평가가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피해자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으면 실제 사람들의 인식이나 아니면 행동이 다 와 닿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걸 메워줄 수 있는, 우리 사회가 시스템을 다시 바꿔내는 것들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글썬요. 김태운 대표님과 유족분들을 비롯하여 여러 분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어떻게 담고 그게 이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이 정말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요정

아리셀 문제를 살펴보다 보면 사실 제도가 없는 건 아닌데 근로감독관도 있고 산업안전 관련 제도도 있고 소방에서도 사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경고로 실제 어떤 대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조사가 실제 어떤 실행을 위한 조사가 아니었던 측면들 그래서 왜 이거를 계속 여기서 막을 수 없었을까 왜 이것이 어떻게 중단되지 않았을까, 라는 어떤 제도와 실행의 간극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와 규범의 형성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지켜져야지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이 철저히 점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완

어떤 말을 좀 하기가 어렵네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주인권 활동가들이 모여 있는 방이 있습니다. 한 100여 명쯤 모여 있는 방이 있는데 어제 아마 그 방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활동가들이 아마 엄청나게 울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이십 몇 년 전에 당시 6살의 나이로 한 몽골 아이가 어머니랑 같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비자가 없었죠. 그래서 한국에 23년간 체류를 하고 비자가 없는 상태로 머물다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다 대학에 가고 이 친구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미등록체류자라는 신분으로 계속해서 쫓기는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돌아갔다가 페널티 없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터줬을 때 몽골에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몽골어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한

국에 올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하다가 한국이 요즘 유학생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학생으로 다시 기회를 잡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졸업하고 나면 대학 졸업을 하고 나면 외국 학생들이 취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정부에서 새로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특화 비자라고 지역 소멸을 막아보겠다고 지역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하면 영주권으로 길을 터주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그 영주권으로 한국에 살기 위한 길을 잡기 위해서 졸업하기 직전에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어제 11시에 사고가 나서 사망하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던 친구였고 이 친구가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활동가가 노력했고 그래서 아주 어렵게 그 트랙을 쫓아가고 그 기회를 잡아가면서 삼십 여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그 끝에 어제 그렇게 공장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텔레그램 방에 올라오고 굉장히 많은 분이 참담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리셀 화재 참사 이후에 사고가 없었냐고 하면 이런 사고들이 끊임없이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구조가 바뀐 게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은요 한국인 대비 7배가 높습니다. 7%가 아니고요. 만인율로 계산하면 7배가 높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7배가 많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정확히는 6.9배입니다. 3년 전 통계니까 지금 더 높아졌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같은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같은 노동자들의 몸에 축적되는 유해 물질 노출 농도를 측정해 본 적도 있습니다. 5년 전 통계인데요. 한국인보다 3배에서 4배가량 높은 걸로 나옵니다. 같은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누가 더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용득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한국인보다 증가율이 5배가 넘습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겠죠. 그러면 최근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최근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숙련 기능 인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단기 순환 정책을 사실 포기했거든요. 이제 정주형으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 오랫동안 더 머물러서 일을 하도록 쿼터를 2021년 2천 명이었는데 아마 올해 3만 5천 명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계절노동자 제도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계절노동자 제도 하에서는 한시적으로 일을 했다가 갑니다. 올해 상반기만 쿼터가 4만 9천 명이었고요. 또 도입 쿼터가 대폭 늘었습니다. 2014년에 5만 3천여 명이었는데요. 올해 16만 5천 명입니다.

가사 노동자도 들어왔습니다. 100명 들어오신 거 아시죠? 내년에 1,200명을 늘린다고 합니다. 조선업에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에 신규 채용된 조선업 노동자 중에 86%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고용주 업종 제한도 확대했습니다. 이제는 요식업과 숙박업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요양 간병 분야로 이주 노동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대폭 확대하려고 합니다. 목표가 30만 명이고요. 현재 지방에는 거의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될 학교들이 많이 있는 건 아실 거고요. 그리고 현재 고등학생 유학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보겠다고 고용 노동자 직장 이동 지역 제한을 걸었습니다. 충청도에서 일을 시작하면 충청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지역 특화 비자가 생겼죠. 인구 감소 지역 89개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한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 5년 동안 일을 하면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다시 광역 비자를 만든다고 합니다. 광역 비자는 지자체장이 일정 정도 비자의 허가 권한을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전라도면 전라도, 경상북도면 경상도 안에서 취업하고 일할 수 있게 지자체장

이 허가를 해준다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민청을 만든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의 이주 노동자, 이주민은 260만 명을 넘었고요. 내년이 되면 300만 명을 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데 작년 말로 노동부 산하 전국 9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모두 폐쇄됐습니다. 돈을 쓰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주민들은 지역 소멸, 인구 소멸, 산업인력 대응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활용, 도구화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주는 게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등 대우를 공식화하려고 하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주 노동자 임금 너무 높다, 어떻게 하면 최저임금 주지 않을지 고민해 보라,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 법을 너무 잘 아시는 대통령께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육아도우미로 쓰면 최저임금 안 줘도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고등학생 포함해서 유학생 대거 유치한 결과가 뭐니까? 한신대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동티모르에서 사람들 강제로 데려와서 일시킨 제한대 사건이 일어났죠. 계절노동자 제도 얼키설키 만들어 놔서 결국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지금 한국에 자국 사람들을 보내는 정부 중에 최초로 필리핀 정부가 올 초에 한국의 기술 노동자 송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한국에 사람들을 보내는 송출국 입장에서 더 이상 한국에 사람을 못 보내겠다고 선언까지 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공공 서비스는 약화되고 제도는 부실하고 전체적으로 이주민을 손쉬운 대체제로 사용하고 있는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인권 침해가 증가하고 외국인들의 사망이 증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빠른 결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들을 바꿔내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죽음들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고, 가끔 저한테 물으시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큰 변화 중 하나는 적어도 예전에는 이런 문

제가 생기면 이렇게 바뀌보겠다, 앞으로 노력하겠다, 또는 우리는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인권 침해 없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실제 내용과 다르더라도 립서비스라도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졌어요. 오히려 차별 대우를 정당화하고 공식화하려고 하는 그 뻔뻔함의 강도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별 대우를 공식화시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도 지난 30년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면서 그나마 조금씩 우리가 제도화되고 그 안에서 뭔가 노력해 온 결과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전부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해 드리고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올 초에, 계절 노동자 인권 침해가 너무 심해서 필리핀에 가서 한국에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만났어요. 이 분들이 한국에 올 때 계약했던 계약서를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이 분들이 200만 원씩 받는다고 할 때 고용주가 이 돈을 주면, 브로커들에게 돈이 자동으로 이체가 되고 실제 이분들이 받는 돈은 7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계약서에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을 못 견디고 이탈하면 법무부가 그 지역에서 다시 이주 노동자를 못 받게 제한을 겁니다. 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브로커가) 계약서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5명씩 한 조로 묶은 다음에 5명 중에 1명이 이탈을 하면 나머지 4명을 모두 강제 귀국한다, 그리고 4명의 임금도 모두 자기들이 갖겠다고 써 놨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2024년 문명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싶은데 너무나 뻔뻔하게 이런 게 계약서에 삽입돼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상황이 됐고 지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뤄 낸, 한국이 이제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성취했다, 인권을 어느 정도 성취했다 하는 말들이, 이주 노동자들 앞에서는 얼마나 공허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최근에 저는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백도명

아까 김태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하고 그걸 역으로 과정과 이유를 짚으면 그 원인에 대한 어떤 예방 대책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수습이 잘 안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방이 안 됐던 이유 내지는 예방하지 못했던 그런 구조들에 대해 배경과 이유가 뭘까, 우리가 어떤 대안이 있을까, 저희 과제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것들이 그런 지점들인데요.

예를 들자면 파견이 이 문제의 어떤 배경이 됐는데 불법인 경우 왜 불법을 불법이라고 단속을 못 하나 이런 것도 있지만 너무 많아서 너무 당연해서 말이야 이런 식의 반응을 보면 그러면 그 안에서 이 파견을 이렇게 불법이더라도 끌어다 쓰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이게 일시적인 어떤 수요가 있고 급박하게 해결해야 할 그런 내용이고 그 위험한,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럴 때 파견을 그냥 불법이라도 갖다 써서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시적이고 급박하고 위험한 작업에 있어서는 단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어떻게 제도적으로 파견이 안 되도록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지점이죠.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 그냥 단순히 서류에 머무르는데, 서류가 아니라 정주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아주 허술한 형태이긴 하지만 위험성 평가와 작업 거부가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이 위험하니까 거부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생기는데 이주 노동자들에게 위험성 평가가 작업 거부권으로 이어지려면 뭐가 필요하겠냐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들인데요. 결국은 인권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인권을 생각하면서, 이런 지점들을, 배경과 원인이 됐던 것들을 바꿔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윤정

이주민 분들의 삶의 구조에 가서 무엇이 제약되는 것인지 알아야

지, 어떤 권리가 행사가 되고 어떤 권리 행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지 이해할 수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후 대안과 희망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미정

지금 희망을 누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희망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가다 보면 저게 희망이구나 이렇게라도 붙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은 많은 노동자나 시민들의 죽음 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죽음에 침묵했다면 그 법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고요. 그 법이 없어서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이 나서서 만든 법이기도 했습니다. 그 법이 있으면 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서서 먼저 단식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얘기하면서 만든 법입니다.

그 법 이전에도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산업안전 관련한 법들이 존재했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 조항만 보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는 다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등록 체류노동자라 하더라도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으면 산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도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 제도를 정말 제대로 적용할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리고 이 제도를 누가 적용하려고 노력하는지 그리고 이 제도를 누가 쓸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 국적을 가진 정주 노동자들도 법에 있는 모든 조항을 다 제대로 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의 외주화라고 얘기하죠. 법에 명시적으로 정규직만 작업 거부권, 작업 중지권을 가질 수 있다. 비정규직은 안 된다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고 있죠. 비정규직들은 작업 중지권 못 쓴다고 다들 알고 있어요.

그건 법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한, 사회적 힘이 그만큼 취약하므로 법이라는 틀은 있다고 해도 그 틀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틀을 썼을 때 내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다고 해도 당장 내일 일할 곳을 잃게 되고, 당장 내일부터 나에게서는 수입이 없어지게 되는, 그리고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법적으로도 보장된 권리조차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 알지만 누구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자들에게 위협이 전가되고 그 위협이 다시 이주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그러다 보니 죽음이 그렇게 사슬처럼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중층화되어 있는 죽음의 사슬을 지금 당장 끊을 수 없더라도 적어도 책임이라도 묻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청의 하청의 하청이라 할지라도 그 본질적 책임을 져야 하는 원청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자 그리고 그가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제재를 가하자, 그래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규정을 만들었죠.

근데 이 법을 처음 만들 때 수없이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또 아쉽게도 죽음이 더 많이 일어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안 되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 이 규정에 따라 판결 난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산업재해에 참사라는 말을 잘 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산재는 대부분 1명이나 2명 정도가 죽는다고 생각하시니까. 한 명이 죽어도 참사이지만 사회적 참사는 규모를 많이 얘기하게 하죠. 그러나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산재이면서도 누구도 참사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정도의 중대재해 참사였습니다.

이 참사에서 사업주가 정말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해서 1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하는 그 실형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저는 앞으로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의미를 갖고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 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1심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결과가 6개월 이

내에 나올지 그 후에 나올지 알 수 없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적용됐는가를 아마 보게 될 거고 그 시험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해에 한국사회에서 2,200 또는 2,400명의 노동자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다 기억을 못 해요. 사실 그리고 그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이 사회에 이야기되지도 못합니다. 그 중 한두 명의 죽음만이 한두 건의 사건만이 사회에서 이야기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힙니다. 이번 아리셀 중대 재해 참사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잊지 말자, 기억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바들을 긴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정부도 참사가 벌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누가 책임이 있다. 그래서 뭘 바꾸겠다 예요.

노동부도 다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교육 열심히 하겠대요. 새로운 대안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나왔던 겁니다. “이주 노동자 자신의 언어로 교육하겠다.” 이번에 하나 더 나오건 “이주 노동자가 이주 노동자를 교육하게 하겠다.” 제가 논의를 좀 길게 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 제기를 누군가 할 때 그래서 너희 대책이 뭐야라고 바로 나오는 답을 원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의 본질적 원인은 무엇이고 이걸 찾기 위해서 이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런 대책을 찾아가자고 하는 과정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이주 노동자의 산재를 더 줄이자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하는데 그것이 이주 노동자에게 계속 교육을 더 하는 것이 근본적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 전체의 구조가 맞물려 돌아가는데 그 구조 안에서 영역들을 나눠서라도 논의하고 일정한 시기가 지나서 이 영역들이 만나면서 전체를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적으로 이제 재판이 들어갈 텐데, 보통 산재가 발생하면 유가족

들은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회사랑 합의를 안 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회사가 지금처럼 아리셀처럼 나 못 하겠다 버티는 경우는 있어도 유가족들이 일부러 버티면서 합의를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과를 받고 제대로 이야기가 되면 굳이 민사를 소송까지 해서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대로 처벌이 되기를 원하는데, 형사재판에 가면 한국의 법정에서는 다 그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들이 이미 합의하지 않았냐, 심지어 엇그제 있었던 동국제강의 하청 노동자 죽음 1심이 이제야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문에 사업주의 처벌을 줄여주는 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했’라는 한 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그게 너무 일반화되어서 판사가 피해자가 직접 그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 피해자를 보고 그 얘기를 했어요. “합의하지 않으셨냐, 합의금을 받지 않았냐. 그런데 왜 회사에 처벌을 원하냐.”

저는 그건 정말로 산재 피해자들에 대한 재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이해를 너무도 못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고는 끊임없이 돈으로만 보상해 주면 된다는 사업주와 ‘그러면 당신들이 받을 보상이 다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재판부가 존재하고 이주 노동자들에게 끊임없이 ‘너희가 조심해야 한다’는 교육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그 죽음을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말로 좀 더 길게 논의해서 제대로 그런 것들을 영역별로 문제 제기하고 천천히 바뀌 가는 사회적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에서 사망한 외국인이 1만 5,325명입니다. 매우 많죠. 그중에서 사망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44%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싶는데 정부 통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노동자로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파악되고요.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도 파악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정부가 원인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얼마나 정부가 관심이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잘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저는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다 공허한 립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생기고 걸맞은 예산이 투여되어야 문제가 개선되기 시작하는 것이지. 들여다보겠다 노력하겠다는 것은 그냥 하는 말입니다.

이주민의 인권, 상담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사라지고 센터가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점점 늘어나니까 문제는 더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센터가 사라졌다고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되고 있을까, 간단히 얘기하면 법무부 출신인 행정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괜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행정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요. 행정사를 찾아가면 예를 들면 인권위에 진정서 써주는데 지금 공식 단가가 100만 원이거든요. 인권위 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진정서 써주는 데 100만 원, 그 다음에 노동부 진정해 주는 거는 200만 원, 비자 변경해 주는 건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센터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사라지고 상담했던 전문가들이 사라지면서 이 부분을 퇴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맡고 그 분들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몇 백만 원씩 받아서 그걸 해결해 주는 시스템으로 안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얘기하면 그 정도 비용을 낼 수 없는 사람은 진정조차 못 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권문제든, 산업재해든 해결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정리하면 차등 대우가 공식화, 정당화되는 지금의 과정을 막아내지 못하면 정말 지금 상황도 끔찍하지만, 더 끔찍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기 때 이주민들에 대한 차등 대우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정

부가 공식화시켰거든요. 많은 이주민들이, 진짜 위기나 재난의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고 저 맨 마지막 순위가 된다는 것을 코로나 19 때 확인한 겁니다.

제가 중국 동포분들과 인터뷰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 물어보면 많은 분이 저희가 한국인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 노동부에 찾아가고 또는 어디 구청에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행사 찾아가서 어떻게 해결할지 비용을 주고 해결한다, 또는 누구한테 물어봐서 브로커를 주고 해결한다, 방식이 훨씬 높게 나타나요. 이건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한국 정부가 또는 한국 시민사회가 이주민들과의 신뢰를 그 정도 쌓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지금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주민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예산, 인력,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당장 필요하고 또 하나는 한국 사회 전체에서 차등 대우를 공식화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지금 당장 끊고 모두가 재난과 위기의 순간에서도 똑같이 자원의 분배가 되고 구조가 되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당장 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노력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들을 거쳐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태운

139일 동안의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회적 참사가 벌어졌을 때 조사를 위해 민관 합동 기구를 설치하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이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이 합동으로 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합니다.

두 번째는 예산과 인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예방과 관리 감독의 기능들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그 가운데에서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참사를 통해서 아리셀 회사는 어떤 불법의 온상이었다는 것들이 밝혀졌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부분에서 완전히 바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히 예방 조치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 구조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제도조차도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지 않는데, 이주 노동자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근무를 하고 있느냐는 부분들입니다.

불안정한 고용 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고용 구조에 대한 실태 조사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50인 미만 열악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와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계속 이 참사들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있는 규정조차도 안 지켜지는 부분들, 중대재해나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2인 이상의 재해가 벌어졌을 때 근로감독관은 즉각적인 구속영장을 검찰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가 아리셀 참사 진상 규명 조사를 위해 국회며 노동부며 경찰 다 뛰어다니면서 싸우면서 두 달여 만에 그 규정에 따라서 구속 수사가 됐습니다. 첫 번째 사례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 이 부분은 규정상 참사가 벌어지면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않거나 싸우지 않으면 그 규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업주가 한 것은 증거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조작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개별 접촉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사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시료 바꿔치기하거나 성적 조작했던 내부의 문건들을 파기했습니다. 아리셀

참사는 그나마 빨리 압수수색을 해서 자료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정도였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진상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위험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물질이 혹은 나의 작업이 얼마만큼 위험한가에 대해서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만들어져야지, 이거에 따라 기준들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위험 물질을 다룰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알아서 평가해서 그냥 제출하고 제출된 것들이 조작되어 있는 혹은 허위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않고 그냥 점수 주고 잘했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적인 명예 감독관이나 혹은 안전지킴이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사업장별 위험성에 대한 평가들 그리고 어떤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이 100여 건 이상이 지금 이번 참사에서 밝혀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노동부가 내놓은 정책이라는 거를 듣고 저희가 되게 분노했던 게 비상구에 1억씩 돈 들여서 색깔 알록달록하게 해놓고 계단 어떻게 설치한다,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내놔고, 교육은 입국했을 때 한 번 교육하고 배치하면 된다, 이거였습니다.

내가 어떤 유해 물질을 다루는지에 대한 현장 교육이 필요한 거지 전체적인 안전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서의 안전 교육들, 유해 물질에 대한 교육들 이게 제도적으로 강제돼서 그 교육을 받은 이후에 실제 작업에 배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안부의 재난에 대한 업무 매뉴

일에 대한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이런 재난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지자체에다 통합지원센터를 만들더라고요. 이번 참사 때도 5층에 한 건물 통째로 통합 재난 지원 기구라고 만들었는데 그 기구에는 변호사, 노무사 그리고 트라우마 센터,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 와 있고, 그런데 인력과 예산이 제대로 쓰여야지, 그런 것이 저희 유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시다. 재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주십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기구는 없고 노무사를 통해서 공단에서 산재보험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계산해 주는 거 그리고 장례 절차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전부였어요.

유가족들은 이런 참사들 앞에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진상들을 규명해 나가고 이 억울함을 밝혀나가는 과정 속에서 유가족들은 트라우마가 일정 정도 치유될 수 있는 부분이죠. 단순하게 어디가 아프십니까? 힘드시냐는 그런 트라우마 센터는 필요하지 않아요. 진상 규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유가족들은 일정하게 치유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된 이후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거지 일시에 몇 십억 씩 돈 들여서 그런 식의 통합지원센터는 유가족들한테 의미가 없다. 예산의 낭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과 인력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유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걸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요정

개인적으로 재난 인권 관련 연구를 하면서, 이제 아리셀을 보면서 인권 과제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이 저는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권리라는 것을 헌법에 넣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재난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본권을 국민만이 누리는 민족주의적 헌법에서 인간의 권리로 전환해 나가는 노력과 그런

사회적인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주민을 그냥 단순히 인구의 도구로서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단절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인권학회에서 앞장서서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유족분들이 계속 싸우셔서 저희 여태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이후,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정말 장렬하게 싸우셔서 특조위가 만들어지고 겨우 진행되고는데, 조사가 싸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어떤 권리로서 국가의 책무로서 만들어가도록 제도 설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개별적인 개인에 대한 심리적 지원만이 아니라 함께 싸우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집단의 어떤 권리, 노조를 만들거나 단결권과 마찬가지로 연대권을 인권의 영역에서 제도적으로 승인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리셀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한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같이 마음으로 깊이 느껴주시고 저희가 학자로서 할 수 있는 일 같이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